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2차 사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2023. 4. 20 (목) 오후 2:00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원회 회의실)



주최 |



민주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 |



국회의원 김상희·강훈식·김영진·김영호



《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소개 》

■ 목적

- 윤석열정부 출범 1년간의 총체적 무능과 국정파탄 상황 평가
- 경제·사회·정치·외교안보를 총망라한 실정 지적 및 대안 제시

■ 개요

- 일시 : 4월 2주차 ~ 5월 2주차, 총 5주간 매주 1회 진행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원회 회의실)

분야	일정
(1차) 경제	4월 13일(목) 10:30
(2차) 사회	4월 20일(목) 14:00
(3차) 정치	4월 27일(목) 10:30
(4차) 외교안보	5월 3일(수) 14:00
(5차) 특별토론	5월 9일(화) 14:00



《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전체 프로그램 》

분야	일정	주요내용
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	4월 13일(목) 10:30	◦ 좌 장: 우원식 국회의원(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발제1: 주병기 교수(서울대학교)
		◦ 발제2: 위평량 소장(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 토론1: 김한정 국회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토론2: 오기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 토론3: 홍성국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2차 (사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4월 20일(목) 14:00	◦ 좌 장: 김상희 국회의원(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
		◦ 발제1: 김윤 교수(서울대학교/보건의료)
		◦ 발제2: 이병훈 교수(중앙대학교/노동)
		◦ 발제3: 반상진 교수(전북대학교/교육)
		◦ 토론1: 강훈식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토론2: 김영진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3차 (정치) “무너진 국가시스템, 불공정 정부”	4월 27일(목) 10:30	◦ 좌 장: 박범계 국회의원(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 발제1: 유종성 교수(가천대학교)
		◦ 발제2: 지병근 교수(조선대학교)
		◦ 토 론: 유관 상임위 국회의원
4차 (외교안보)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5월 3일(수) 14:00	◦ 좌 장: 김민석 국회의원(정책위의장)
		◦ 발 제: 최종건 교수(연세대학교)
		◦ 토 론: 유관 상임위 국회의원
5차 (특별토론)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	5월 9일(화) 14:00	◦ 진 행: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 발 제: 시민발언자들 (안전, 언론·노조탄압, 주69시간 논란, 고물가 등 관련)
		◦ 토 론: 유관 분야 국회의원



《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

제2차 사회 :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 목적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사회분야 평가
- 정부의 세부 분야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당의 대응과제를 제시

■ 주요 내용

- 주 제 : 윤석열 정부 1년 사회분야 정책 평가 및 대응과제
- 일 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당 정책위의회의실(306호)
- 주 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주 관 : 국회의원 강훈식·김영진·김영호

■ 진행 순서

시 간	순서	패널 및 주요내용
~ 14:00	사전등록	
14:00 ~ 14:15	국민의례	진행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인사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인사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14:15 ~ 14:20	장 내 정 리	
14:20 ~ 14:25	[좌 장] 김상희 국회의원(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	
14:25 ~ 15:10	발제 (각 15분)	• 주제: 윤석열 정부 1년 보건의료정책 평가 발표: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 • 주제: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 발표: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 주제: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평가 발표: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15:10 ~ 15:40	패널토론 (각 10분)	• 강훈식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김영진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김영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 간사)
15:40 ~ 16:00	종합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Contents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2차 사회 :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인사말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i
------------	---

발 제

1. 보건의료정책 부문

김윤 교수 (서울대학교)	1
---------------	---

2. 노동정책 부문

이병훈 교수 (중앙대학교)	19
----------------	----

3. 교육정책 부문

반상진 교수 (전북대학교)	33
----------------	----

토 론

• 강훈식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53
• 김영진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57
• 김영호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간사)	61

인사말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안녕하세요? 민주연구원장 정태호입니다.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차례에 걸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1년을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굴욕과 참사, 경제는 침체와 무능, 국정은 불안과 혼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대외적 환경을 넘어 내부적으로도 복합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해야 할 사회정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시대를 거스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로사와 거의 동일한 의미인 ‘69시간 노동’을 개혁이라는 이름을 달고 추진하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대립하는 것인냥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는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정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이야말로 약자복지를 더 튼튼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윤석열 정부 1년 사회분야의 난맥상을 정확하게 짚고 정책야당, 대안야당으로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다짐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끝으로 좌장을 맡아주신 김상희 의원님, 발표해주실 김운 교수님, 이병훈 교수님, 반상진 교수님, 그리고 상임위 간사로서 토론에 임해 주실 강훈식, 김영진, 김영호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3년 4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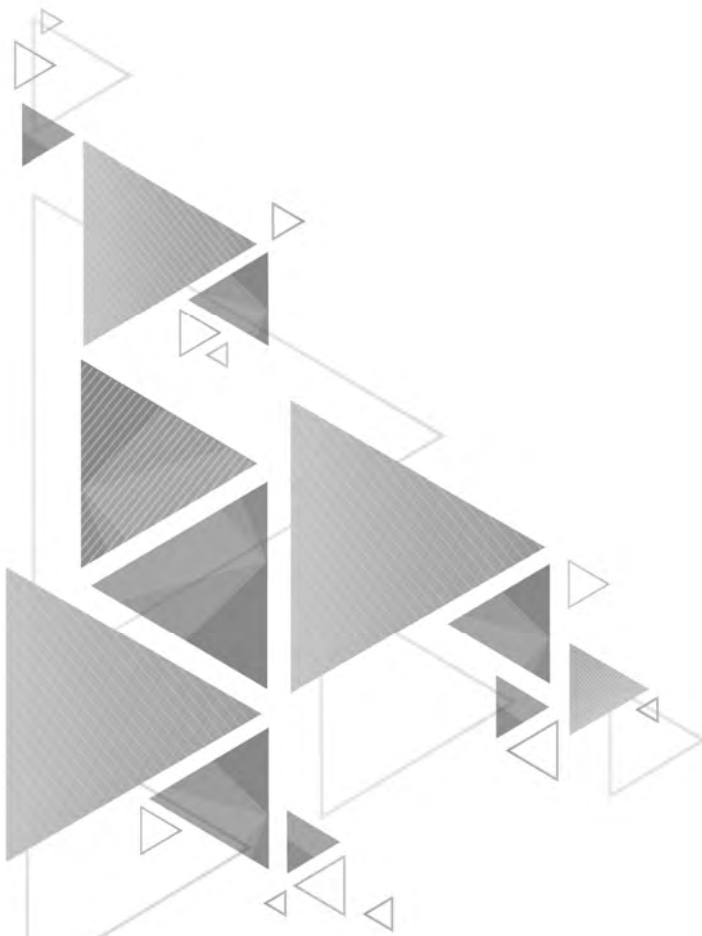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발제 1

보건의료정책 부문

김윤 교수
(서울대학교)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2023년 4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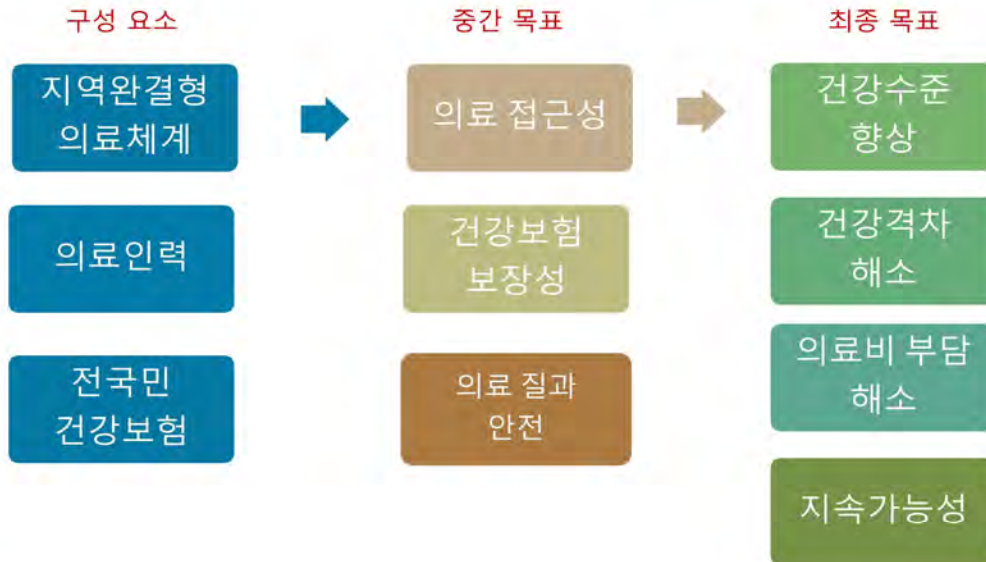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 윤

현황

우리나라 의료체계 평가

WHO 의료체계 구성요소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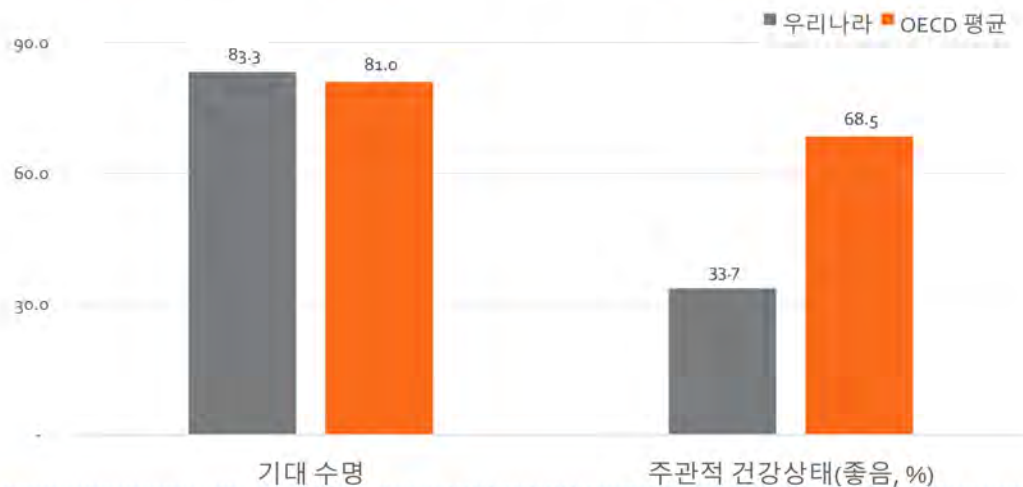


[건강 수준]

오래 살지만 건강하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

▶ (주관적 건강상태 저해 요인)

거동 불편=돌봄 공백, 만성질환=부실한 일차의료, 낮은 교육 수준=의료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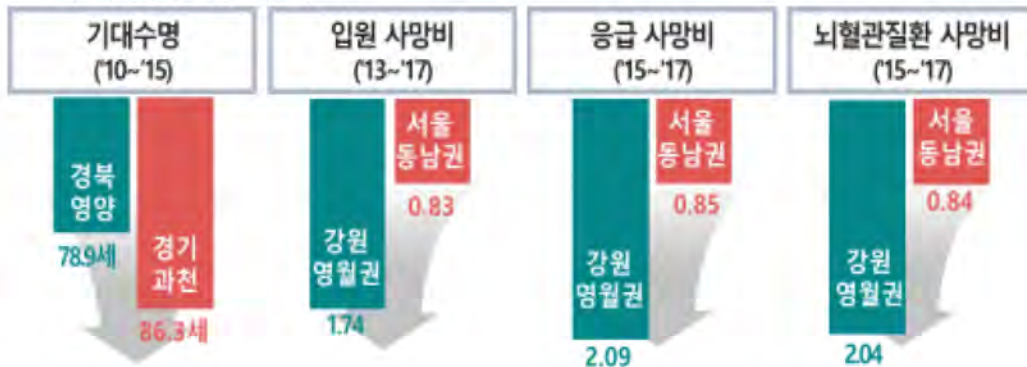
[건강 격차]

의료양극화와 건강불평등

▶ 소득계층 간 기대수명 격차:('05)6.1년 → ('15)6.6년 확대

▶ 소득 상위 20% 81.1→85.1년 vs. 하위 20% 75.0→78.6년

▶ 지역 간 건강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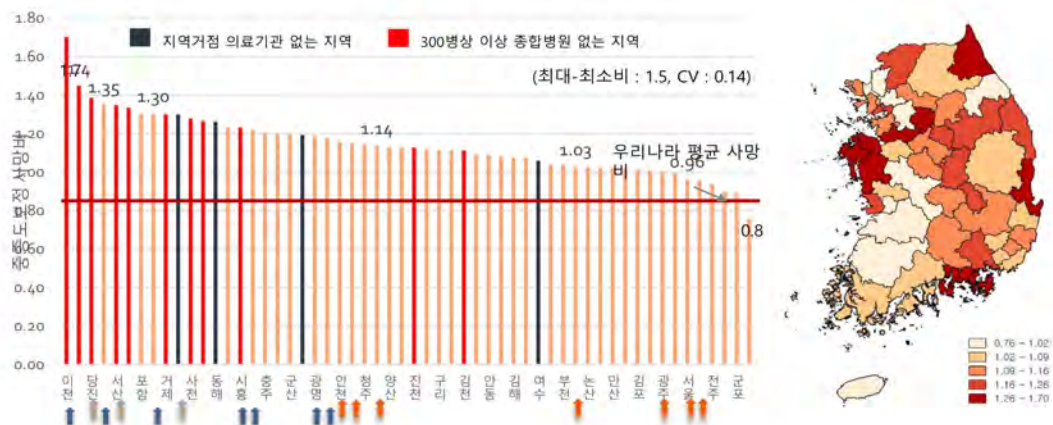


▶ 5

[건강 격차]

큰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높은 입원환자 사망률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 (권내 이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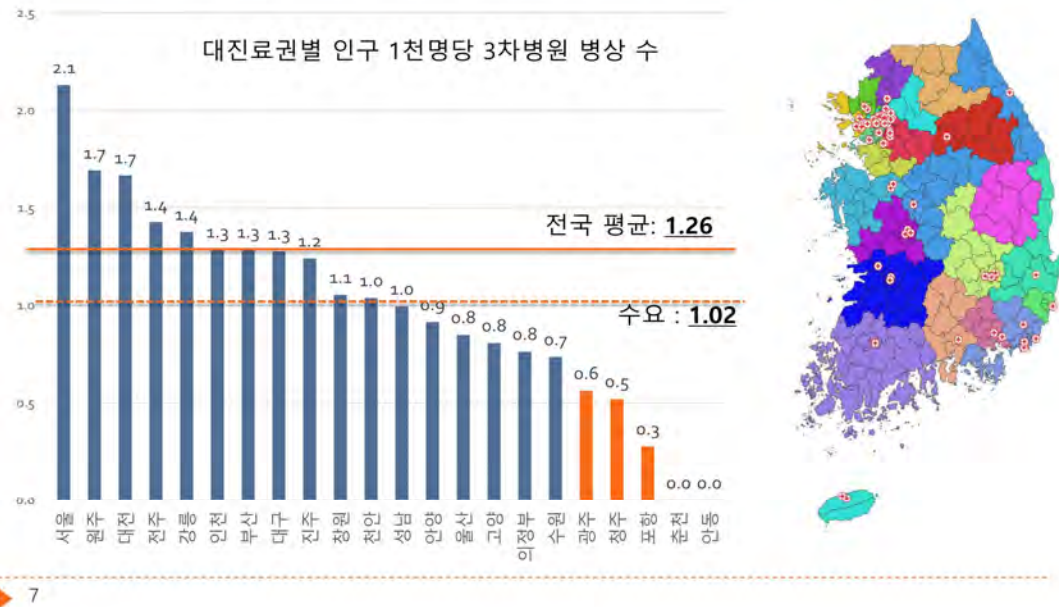


중증도보정 사망비: 실제(actual) 사망자 수와 환자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expected) 사망자 수의 비 (중증도보정: 140개 진단단군별 성별, 연령, 보험료분위, 입원경로, 수술여부, 동반질환(CC)을 독립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 구축)

▶ 6

[건강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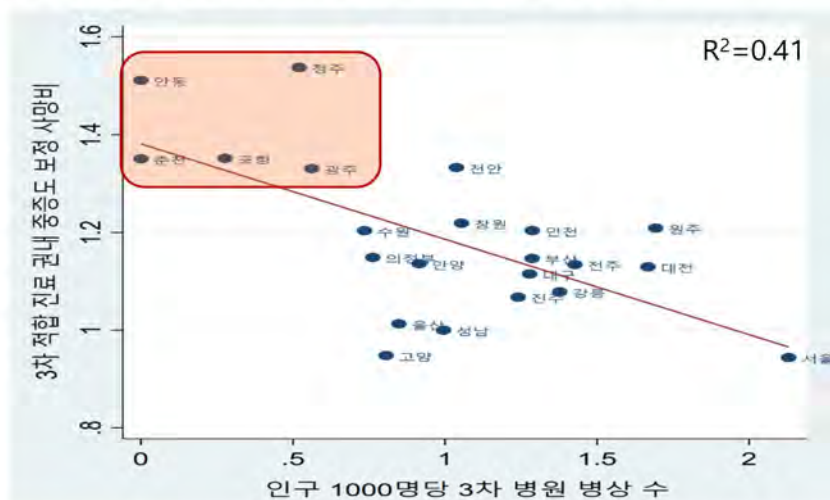
대진료권 간 상급종합병원 병상 불균등 분포



[건강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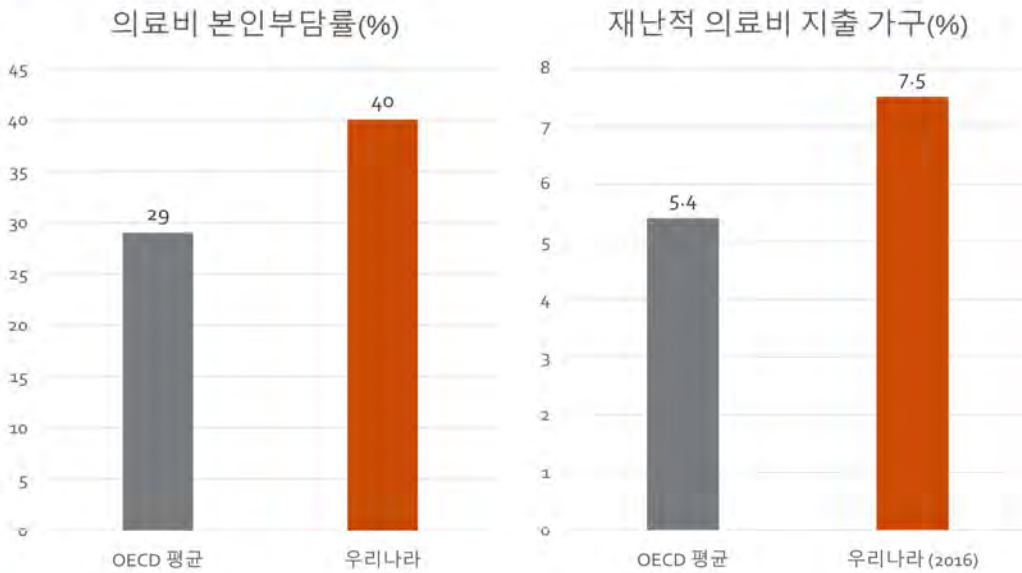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높은 사망률

▶ 3차병원 적정공급 → 적정 이용 → 사망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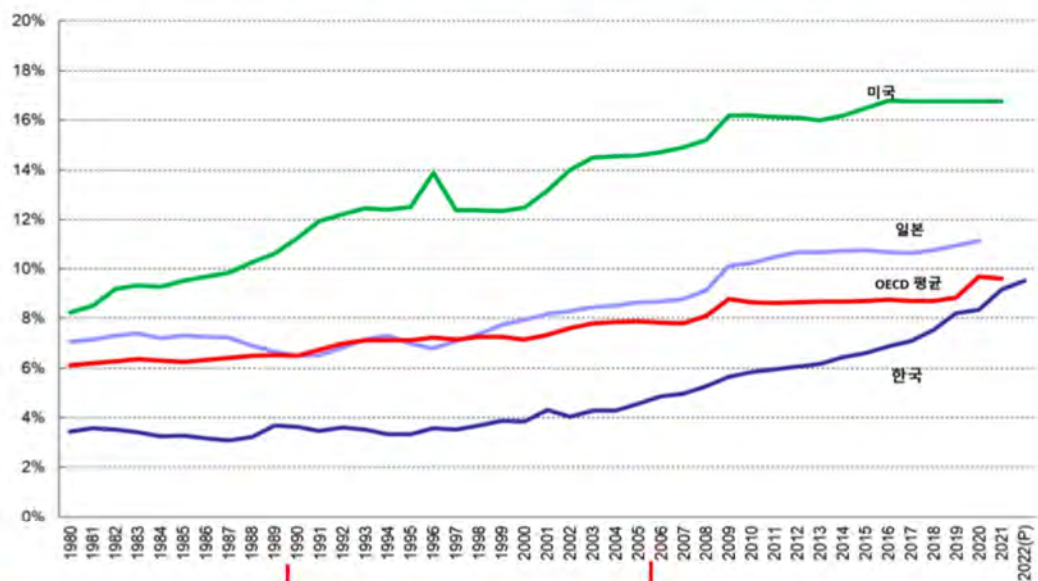
[건강보험 보장성]

높은 본인부담률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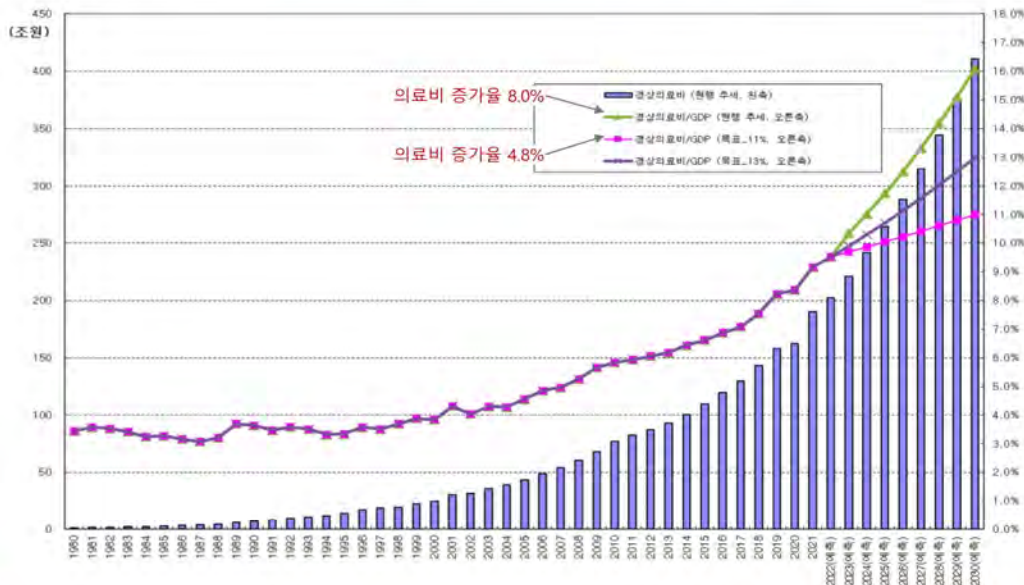
OECD. Health Data. 2021

[지속가능성] OECD 평균에 근접한 국민의료비 (잠정치) '22년 GDP 대비 10% 근접 - OECD 평균 도달



정형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방향성. 2023

현재 (2010-2022) 진료비 증가율 지속 시 2030년 GDP 대비 의료비 16% : 미국 수준



우리나라 의료체계 평가 : 요약

- ▶ 건강 수준은 좋은 편이나
계층 간 및 지역 간 건강 격차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 의료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 보험의 보장성은 정체되어 있음
- ▶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급격한 의료비 증가에도
단기적으로 의료 접근성과 건강 불평등을 훼손하지 않는
의료비 억제 방안 찾기 어려움

의료체계의 구조적 비효율성

- ▶ 병상 공급의 과잉과 불균등 분포
- ▶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 무한 경쟁, 각자도생
 - ▶ 1차-2차-3차 의료의 기능 중복
 - ▶ 응급, 심뇌, 소아 등 전문센터의 과잉 공급
- ▶ 취약한 일차의료
- ▶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민간의료보험과 행위별수가제



평가

문재인 정부 의료정책

보건의료 국정과제

- ▶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가계 부담 경감
 - ▶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 **(치매 국가책임제)** '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 추진
 - ▶ '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 ▶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 ▶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
 - ▶ 1차와 3차 기능정립, 의뢰·회송, 정보교류시스템
- ▶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 공공성 강화**
 - ▶ 격차 - 의료취약지 300병상 이상 거점종합병원 설립
 - ▶ 공공성 - 응급헬기, 소아전문응급센터, 재활병원, 외상 및 심혈관 센터
- ▶ **예방적 건강관리와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 ▶ **감염병 관리체계 -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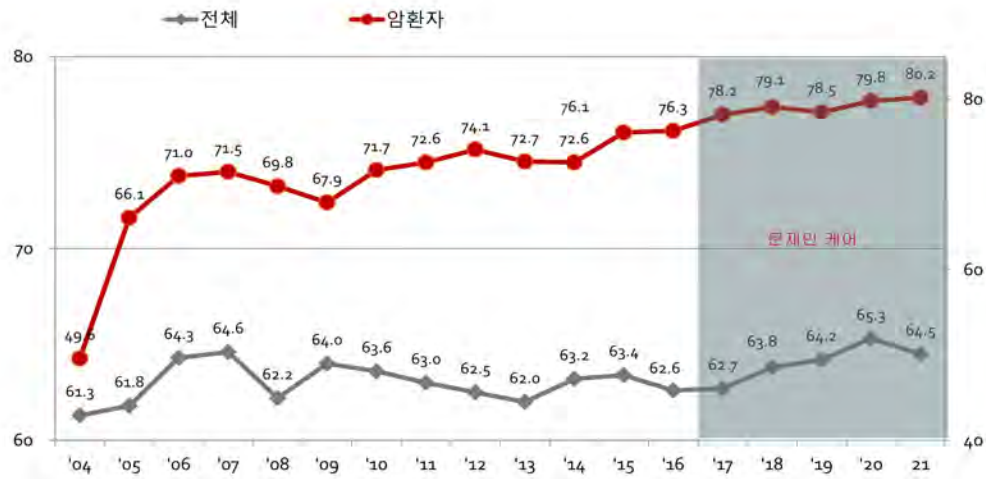
▶ 15

문재인 케어

- ▶ 5년간 **30.6조** 투자 = 누적 적립금 약 **10조** + 보험료 인상 **20조**
 - ▶ 의학적 비급여의 해소
 - ▶ 본인부담금 상한제 강화 - 소득 약 10%
 -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강화
- ▶ 건강보험 보장률 **70%** +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감소

▶ 16

[보장성] 건강보험 보장률의 정체 – 문케어 목표 70%



17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 ('17~'19) – 0.3%p 감소

OECD 평균 대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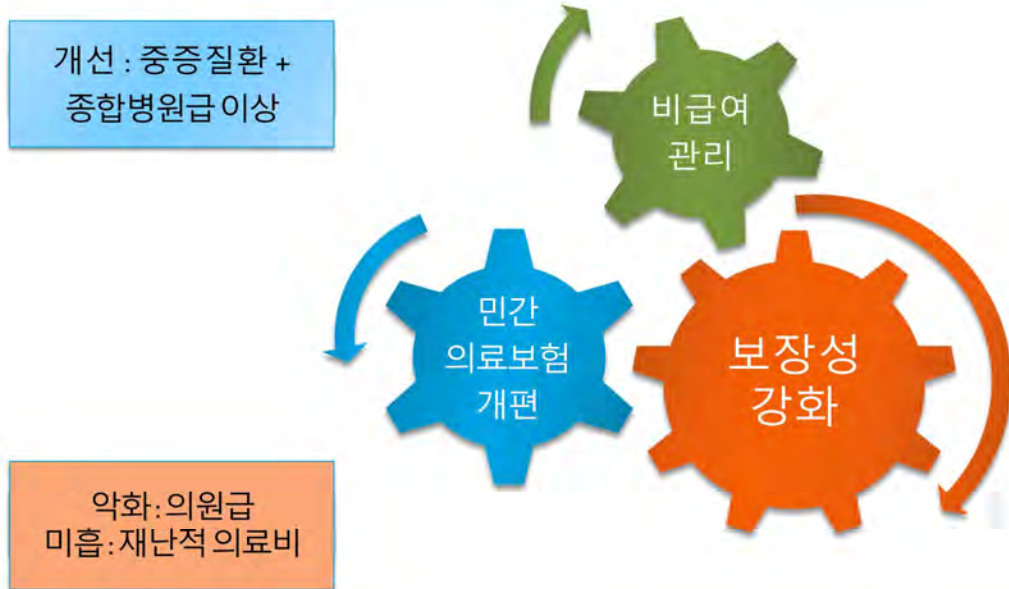
주: 가중치 적용. 재난적 의료비 발생은 의료비가 소비 지출의 10%, 25%를 넘는 경우, 지불 능력(생활비를 제외한 소비 지출)의 40%를 넘는 경우의 세 가지 방식으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7~2019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산출함.

18

김수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가구 의료비 부담 변화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20. 1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절반의 성공



▶ 19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정책 미흡



▶ 20

평가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

▶ 21

국정과제 (1)

- ▶ 66. 필수의료 기반강화 및 의료비 부담완화
 - ▶ (필수.공공의료 강화) **인력.인프라** 강화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 ▶ 재정계획 없는 필수의료 대책 발표 - 재정투자 규모 연평균 1조원 미만 추정
 - ▶ 인력.인프라 확충 거의 없는 '공공정책수가' 중심 정책
 - ▶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확대 등
- ▶ 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 기재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예산 삭감
 - ▶ 방역.의료 대응체계 개편, 재유행 대비 백신, 치료제 확보, 이상반응 국가책임
- ▶ 45. 100세 시대 건강.돌봄 강화
 - ▶ 지역사회돌봄 - 시범사업 축소, 예산 삭감
 - ▶ 요양-간병 내실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급여화

▶

국정과제 (2)

- ▶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 (스마트 건강관리) ICT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 ▶ (아동진료체계) 아동주치의 시범사업
 - ▶ (전국민 마음건강투자) 정신건강검진체계 단계적 도입
 - ▶ (비대면 진료 제도화)
 - ▶ (예방접종 확대) 국가 필수예방접종 확대
- ▶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도약
- ▶ 43. 맞춤형 기초보장
 - ▶ 상병수당 도입 시범사업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위기론'

- ▶ 윤석열 대통령(12월 13일)
 - ▶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언론-문케어 폐기 선언으로 해석)
- ▶ 대통령실(12월 13일)
 - ▶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
 - ▶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 ▶ 박근혜 정부 당시 0.99%였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전임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
 - ▶ **초음파와 MRI**는 문재인 케어 적용 첫 해인 2018년 1,8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 원으로 3년 새 **10배**나 급증했습니다.
 - ▶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200~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가짜 재정위기론

- ▶ 건강보험누적적립금
 - ▶ 문케어 시작할 때 20.1조(16) → 문케어마칠 때 20.2조원(21)
- ▶ 건강보험 재정 전망-비현실적 가정에 근거
 - ▶ (건보공단작성, 감사원 등 인용) 2040년 누적 적자 678조원 추계의 가정
 - ▶ 2026년 건강보험료 상한선 8%에 도달 이후 15년 동안 보험료 인상하지 안한다고 가정
- ▶ 기재부, 감사원, 국회 예정처 재정전망-모두 부정확
 - ▶ (기재부)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 도달 시점 -: '22년 예상 - 실제 : '28-'30년 예상
 - ▶ (기재부) 누적적립금 - 기재부 '25년 고갈 예상 - 복지부 '25년 15조 예상
- ▶ 건강보험료 인상률

노무현 5.6%	이명박 4.0%	박근혜 1.4%	문재인 2.3%	윤석열 1.7%
-------------	-------------	-------------	-------------	-------------
- ▶ (감사원) 초음파, MRI 남용-2천억원 불과 :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약 0.2%



정책 과제 – 필수의료 제공, 건강 격차 감소, 의료비 절감

- ▶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병상 공급 적정화-의사 공급 증가
 - 사망률 4%, 지역 간 사망 격차 30% 감소
 - 의료비 11조 절감
- ▶ 일차의료 강화
 - 합병증과 사망 감소 및 지역 및 계층 간 격차 감소
 - 의료비 5-9조원 절감 가능
- ▶ 의료전달체계 구축
 - 사망률 감소, 의료비 1.2~3.8조원
- ▶ 민간의료보험 개편
 - 약 5.4~8.1조원 절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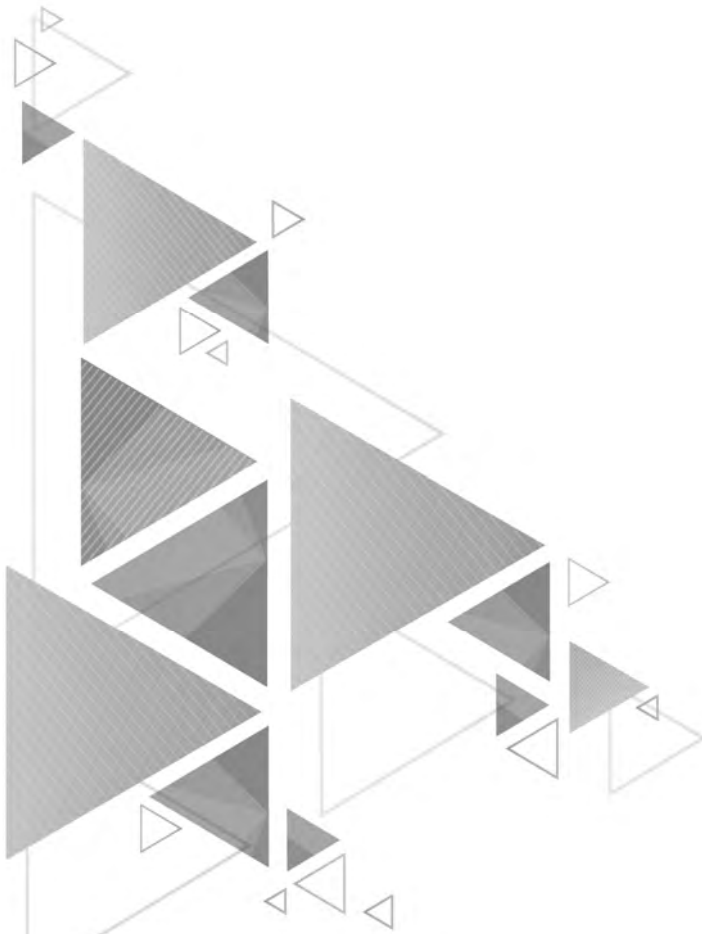
yoonkim@snu.ac.kr



발제 2

노동정책 부문

이병훈 교수
(중앙대학교)



윤석열 정부의 출범 1년 노동정책 평가

이 병 훈 (중앙대)

[민주연구원 토론회]

[2023. 4]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취임식: 자유 35회 강조



광복절: 자유 33회 강조



UN: 자유 22회 강조

❖ **평등과 박애/연대 없는 자유는 악육강식의 노동사회**
불평등 심화 귀결?! ➡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모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자율규제/노조 타??)

2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 · 목표/과제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6대 목표]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국정과제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 행복한 사회

[약속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 |
|-------------------------------------|--|
| 49. 산업재해 예방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산재예방 지원확대 및 대중소 상생체계 확산 ▪ 산재예방인프라 혁신 ▪ 건강보호체계 구축 ▪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재활복귀 지원 ▪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
|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 ▪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공정한 노사관계 구현 |
| 51.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확산 ▪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개선 ▪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국정과제 (계속)

52.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일자리사업 구조조정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전환 시 고용불안 최소화 ▪ 고용안전망 강화 ▪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 제고
54. 전국민 생애단계별 직업 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재구조화 ▪ 온/오프라인 훈련생태계 구축 ▪ 일터학습 인프라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 ▪ 능력개발전담 주치의 도입 ▪ 플랫폼중시자·자영업자 지원 강화 ▪ 미래지향적 방식 전환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약속 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민간 혁신성장 지원, 자율-책임-역량 강화

5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와의 비교

문재인 정부 100개 (16, 18~19, 63~64, 71)	윤석열 정부 110개 (49~56)
<p>❖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p> <p>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16)</p> <p>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18)</p> <p>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19)</p> <p>❖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p> <p>□ 노동존중 사회 실현 (63)</p> <p>□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64)</p> <p>❖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p> <p>후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71)</p>	<p>❖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p> <p>□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49)</p> <p>□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50)</p> <p>□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51)</p> <p>□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52)</p> <p>□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53)</p> <p>□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54)</p> <p>□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55)</p>

노동존중 (노동기본권, 취약노동 권리보장/이해대변, 비정규직 감축, 차별해소 ...) vs. (기업의) 노동가치 (활용?) 존중 (기업 자율, 공정 & 협력의 노사관계 ...)

6

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7/15)

핵심과제	추진방향	주요 세부과제
① 노동시장 개혁	산업화 시대 노동 규범·관행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논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 경사노위를 통한 추가 개혁과제 발굴·사회적 논의
	취약계층 권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공정채용 확산 ▶ 기초노동질서(임금체불 근절 등) 준수 확산
② 중대산업재해 감축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 ▶ 원·하청 상생 안전 협력 지원 확대
③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강화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사업 효율화 ▶ 기업 인력난 해소 ▶ 구직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고용서비스 고도화 및 안전망 강화

7

2023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1/9)

비전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목표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

과제 1

노동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1. 노사 법치주의 확립
2. 노동규범 현대화
3.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

과제 2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1.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2.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 조성
3.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과제 3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1. 기업 구인난 해소
2. 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
3.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으로 개편
4. 고용상황 대응: 단기 컨팅전시 플랜 + 중장기 체질개선

8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기본원칙

- ❖ 국정과제 점검회의 & 청년들과의 대화 (2022.12)
 1. 노동제도 관련 ‘유연성’
 2. 노사협상 관련 ‘공정성’
 3. 노동자들의 ‘안전’
 4. 노사법치주의 관련 ‘법적 안정성’
- ✓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더불어 3대 부패 척결대상으로 강조 (2022. 12/21 기재부 업무보고)
- ❖ 8차 국무회의 (2023. 2/21) **홍보 유튜브 쇼츠**
 -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노조불법/약탈 엄단근절!!)
 - 노동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대
 -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

9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추진배경

- ❖ 2022년 업무보고
 -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 지속,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 MZ세대 등장 등 환경변화로 인한 새로운 이슈 부각
 -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관행은 경제·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보상에도 걸림돌
- ❖ **낡고 경직적인 노동규범·관행은 과감히 혁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강화 → 기업 현장 어려움 해소 및 구조적 문제 해결**
- ❖ 2023년 업무보고
 - 산업·인구구조는 변화하는데, 불합리한 관행·낡은 규범은 잔존, 불확실성 증가
 -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 직면 (임금격차 확대 & 노동인식 변화 등)
 -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경직적인 노동규범 (법경시 풍조, 노사대립, 1953년 제정의 낡은 근로기준법)
 -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가 (일자리증가 축소 전망: 22년 80만개 → 23년 8~9만개)
-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 (2022. 12/12)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이 초래하는 노동시장의 활력 감소
 - 기술혁명과 경제구조 변화

10

노동개혁 방향의 정부 및 경영계&언론 논거

한국의 노동 관련 지표

구분	한국	해외 주요 국가	비교
노동 유연성 (2019 WEF 조사)	54.1점	스위스(76.6) 덴마크(74.1) 네덜란드(69.7) 독일(68.0)	141개국 중 97위
노동 생산성 (2021 OECD 조사)	42.7달러	미국(74.1) 독일(68.3) 프랑스(66.7) 영국(60.6)	OECD 38개국 중 29위
고용률	66.5%	독일(75.8) 일본(77.7%) 네덜란드(80.1%) 스웨덴(75.4%)	OECD 평균 67.8%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경총 조사)	39.2일	영국(18.5일) 미국(8일) 독일(4.5일) 일본(0.2일)	-

*자료: 통계청,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호봉급



❖ 한국경영자총협회 & 머니투데이 공동기획 「노동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상생임금위원회 관련 정부 보도자료;

2019 세계경제포럼(WEF) 한국 국가경쟁력 평가
노동시장 유연성 항목 세부순위

항목	순위
해고비용(Redundancy costs)	116위
고용-해고관행(Hiring and firing practices)	102위
협력적 노사관계(Cooperation in labour-employer relations)	130위
임금결정 유연성(Flexibility of wage determination)	84위
적극적 노동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20위
노동권(Workers' rights)	93위
외국인근로자 고용 용이성(Ease of hiring foreign labour)	100위
노동시장 이동성(Internal labour market mobility)	70위
노동시장 유연성(Labour market flexibility)	97위

*자료: 세계경제포럼(WEF)

주요 선진국 연평균 근로손실일수

한국	39.2일
영국	18.5일
미국	8일
독일	4.5일
일본	0.2일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 후진노동 후퇴의 역주행/편향적 노동개혁(개혁!)

- Business-friendly 노동개혁의 기조에 따라 노동시간(주52시간 상한) · 최저임금(업종 차등화) · 중대산업재해 등의 규제 완화 추진 ⇒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하향 평준화?! (노동조건-임금-노동안전 등)
- 경영계 민원 처리/대변을 위한 편향적 노동개혁 치중 (예: 파견근로의 대상 확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대체근로 허용 등)
- ‘노사 선택권 & 자율규제’ 강조의 노동개혁으로 후진적 노동현실의 후퇴 우려 ⇒ 낮은 노조 조직율, 노동대표 Voice 취약, 불법/위법/편법 만연 등의 노동현장 현실 무시

❖ ‘사회적 대화 없는’ 노동배제의 노동개혁 일방 추진

- 전문가들 내세운 정부 주도의 ‘답장녀’ 추진방식 (미래노동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전문가T/F, 상생임금위원회 및 경사노위 자문단/연구회 등 활용) ⇒ 노동개혁의 사회적 대화 실종 & 노동계 거부/저항에 따른 노장갈등 비용 막대
- 양노중 배제 & MZ세대노조들의 선별적 의견수렴 & 지근관계 치중
- 역지존양식 노동개혁 추진의 실효적 진정성 & 정치적 의도 의문?! ⇒ 근로시간유연화 개편안(주69시간 혼신)의 대통령-고용노동부 정책혼신 해프닝, 2023년 업무보고의 노동개혁 완수 비현실성 ...
- 탄소중립/디지털전환 관련 노동대책 부재 & 노동 배제

❖ 불안정노동의 구조적 문제 외면 & 대중적 대응 + 노조 탄압의 정무적 활용

- 구조적 문제 해소 보다 ‘법과 원칙’ 강조의 대중적 대응 주력 (예: 화물연대 파업에의 업무개시명령 강행 & 안전운임제 일방 폐지,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없는 상생협력 & 손배소송 청구, 권족의 월례비 수사)
- 노조 파업/비리 및 공안사건 등의 명분으로 노조 대응 무력화 (※ 영·미의 신자유주의 노동개혁) & 민주노중 및 건설노조 등의 경찰-국정원-공정위 압수소색 & 기소 ⇒ 화물연대 파업에의 강경대응 직후 대통령 지지율 9.1% 상승 (반노조 국민여론/정서의 정무적 활용?!)

진짜 노동개혁 해야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두 얼굴: 비동시성의 동시성

박사장네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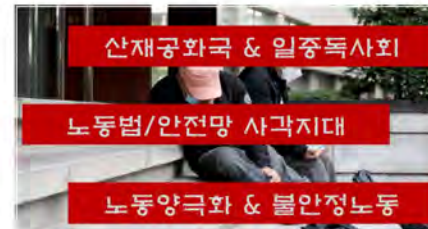
김기택네 집



선진 경제



후진 노동



후진 노동의 현실 단면 (I)

- 산재사망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보다 40% 높아



- 노동시간 줄었지만, 아직도 OECD 평균 보다 201H 더 길어



후진 노동의 현실 단면(II)

- 근로감독관 늘렸음에도, 노동법/안전망 사각지대 여전히 넓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시간외수당 미지급	고용보험 미가입
2016년	1.43조원 (325.4천명)	7.3% (112.6만명)	52.7% (75.8%)	35.7% (57.6%)
2022년	1.35조원 (237.5천명)	4.4% (74.3만명)	47.0% (71.1%)	28.8% (46.7%)

(주) (괄호안) 피해/미달노동자 수 & 비정규직 비율; 최저임금 미만 2021년 데이터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 근로형태부가조사

- 일자리정부 자처했으나, 고용 실적 미흡 & 일자리 질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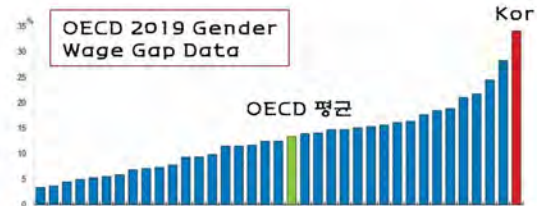
	고용율(%)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전체	여성	전체	청년	
2016년	60.6	50.3	3.7	9.8	32.8
2021년	60.1	50.7	4.0	9.0	38.4 ('21)

15

후진 노동의 현실 단면(III)

-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심각하지만, 성별 & 고용형태 임금격차도 OECD 최고 수준

단위: 원(시간당 임금)



주요국의 규모별 월 평균임금 격차 비교(5~9인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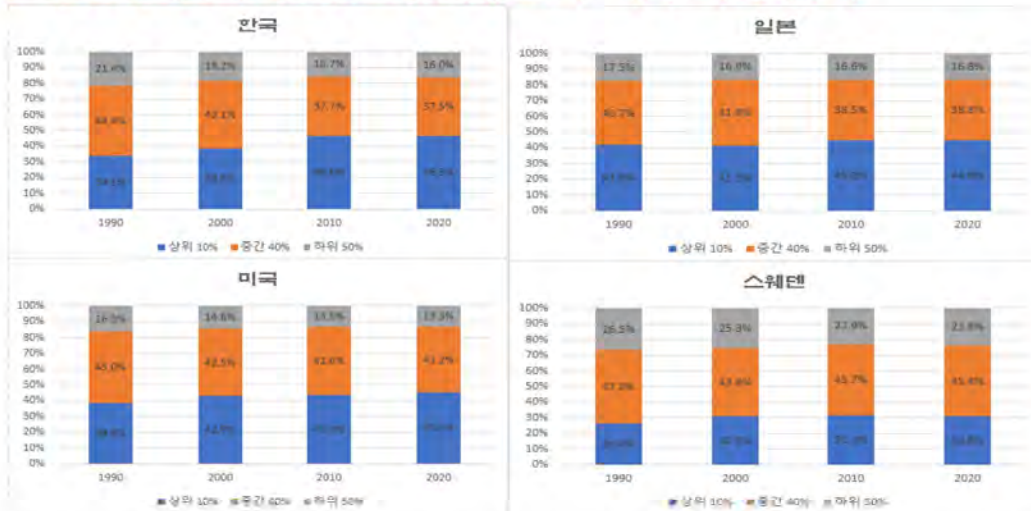
구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5~9인	100	100	100	100
10~99인	115.9	108.6	112.3	105.5
100~499인	139.9	113.9	131.2	125.4
500인 이상	199.1	129.6	154.2	157.7

자료: 고용노동부 데이터 재가공 등

16

[참고] 노동소득 격차의 국제 비교

■ 주요 선진국 대비 노동시장소득 격차 확대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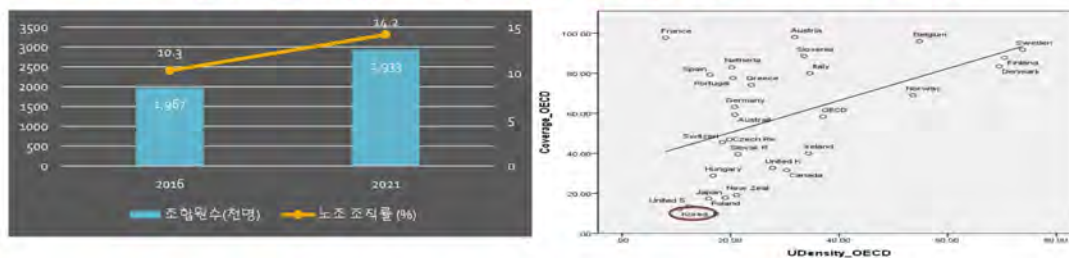


자료: World Inequality Database (<https://wid.world/data/>)

17

후진 노동의 현실 단면 (IV)

■ 노조 조직화 늘어났으나, 교섭/권익대변 매우 제한적



■ 노동생산성 개선되었지만, OECD 회원국 30위



✓ 노사관계 국가경쟁력 IMD&WEF 최하위 & 노동대체 Robot density(제조업) 세계 No. 2

18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대응의 민주당 과제

■ 대안적 노동개혁의 비전 공론화 & 전략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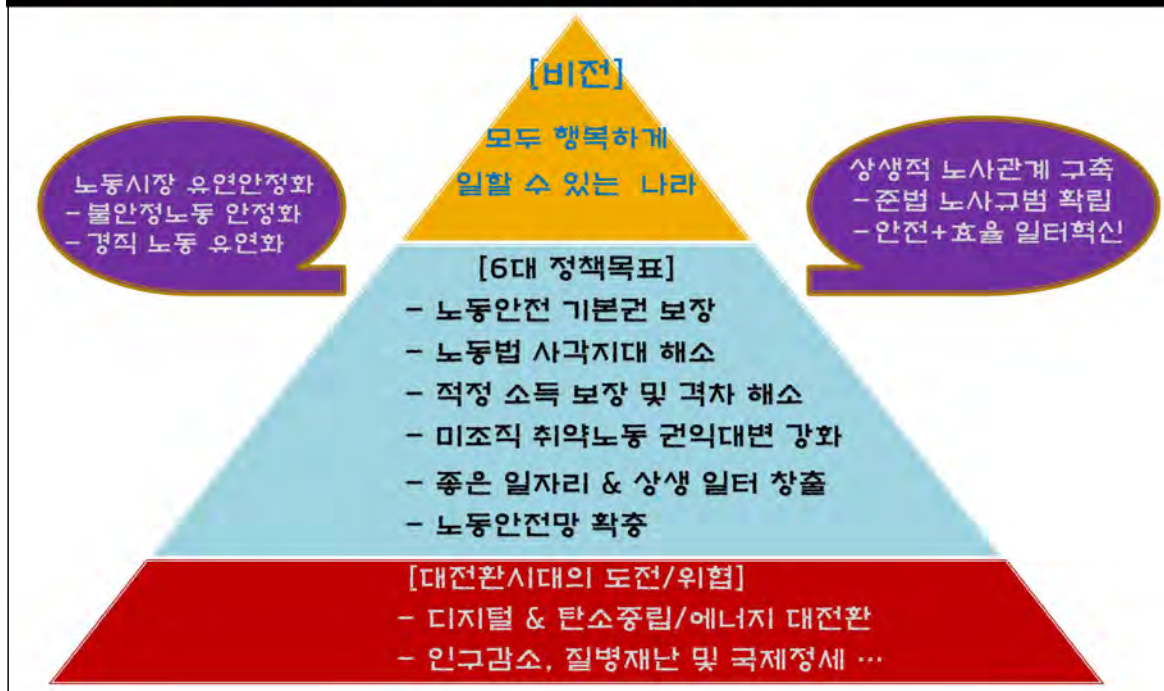
- ✓ 수세적 현안 대응 (예: 안전온임제 대응실패)을 넘어 노동개혁의 대안적 비전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상생적 해법, 취약노동 보호, 대전환기 노동대책 등 포함) 수립 & 전략적 공론화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추진)
- 민주당 강령의 노동비전을 실천적으로 진정성 보여줘야!! (①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②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③ 적정임금 보장과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④ 참여·존중·소통의 직장 민주주의 실현; 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⑥ 노동기본권 강화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역주행 노동개혁 저지 & 노동존중의 정주행 개혁 추진

- ✓ 노동 개혁 저지의 당론 명확화 + 역주행 반대의 노동사회 연대 구축 & 국민적 담론 확산
- ✓ 노동존중 V.2 정주행 개혁 추진 → 노란봉투법 입법 +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 일하는 사람 보호 기본법, 산업전환 노동지원법 등에 대한 선제적 공론화
- 2024년 총선 결과에 따라 역주행 노동개혁의 제동 vs. 가속화 여부, 좌우 팀을 유념해야

19

노동개혁의 대안적 비전?!



“특권과 차별, 불평등 없이 모든 사람이 기회를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모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감염병,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 사회,
혁신과 성장을 통해 국민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번영하는 나라,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정당”
되어 주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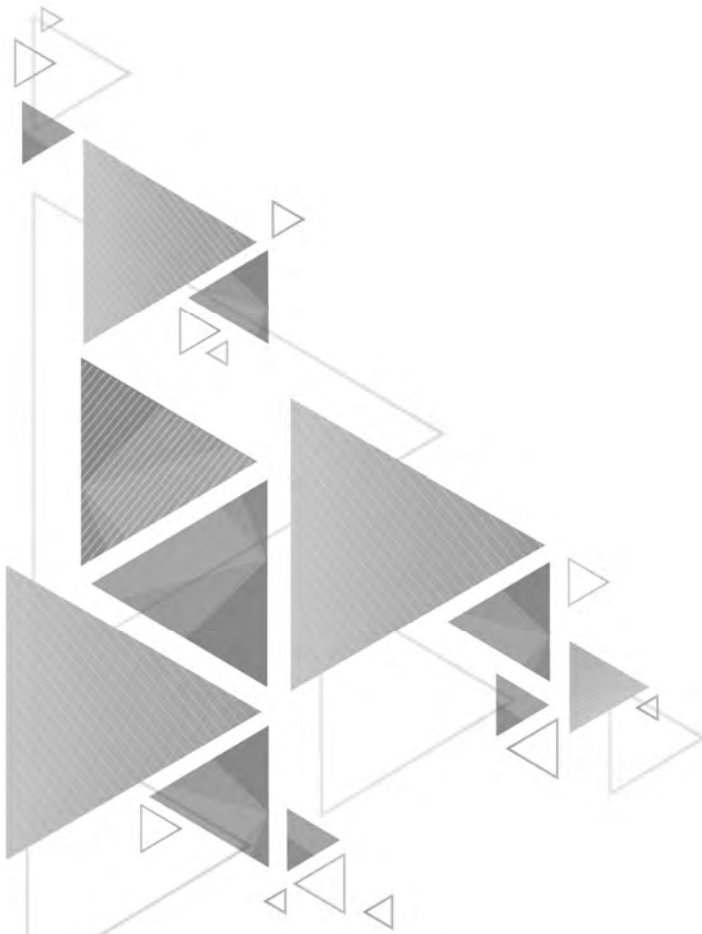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발제 3

교육정책 부문

반상진 교수
(전북대학교)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반상진 (전북대)

CONTENTS

- Ⅰ 정권별 교육정책의 지향 차이
- Ⅱ 20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비교
- Ⅲ 윤석열 정부, 교육공약-국정과제-교육부 업무보고와의 연계성
- Ⅳ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과정의 5대 난맥상
- Ⅴ 총평 및 향후 대응 방안

I 정권별 교육정책의 지향 차이



II 20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비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육공약 중 **중복** 혹은 **유사한 공약 과제**는 13개 정도(27.1% 정도 유사)
 - ✓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지역 소재 대학 지원, 대학평가 제도 개선, 대입제도 개선, 평생교육, 직업교육 지원,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 하지만 유사한 공약 과제 중 **실천 방안의 지향점이 상이한 것도** 특징임.
 - ✓ 지방 소재 대학 발전 방안, 대학평가 제도 개선, 고등교육재정 확보 등은 지향하는 가치가 다름.
- **유·초·중등교육 분야**는 **중복** 혹은 **유사한 공약 과제**가 전무한 것이 특징임.

II 20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비교

구분	민주당 (12개 분야 48개 공약과제)	국민의힘 (15개 분야 47개 공약과제)
유아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 및 보육의 단계적 통합 추진 국공립유치원 비중 상향 및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사 동등 처우 노력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컨트롤타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실시 민간 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고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체-지자체-대학 동반성장형 '지역대학혁신체제' 조속히 확대 대학평가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중-고-대학 연계 육성으로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 조성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마련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입 공정성 위원회 설치 및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대입 전형 선발 인원 합리적 조정으로 학생선발의 공정성 제고 국가교육위원회 주도 2028학년도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입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로 부모찬스 차단하고 사교육 등 외부요인 최소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의 직무 경력과 능력을 인정하는 선행학습 인정제 도입 평생교육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세대별·개인별 맞춤형 교육 제공
디지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시대를 주도할 '100만 혁신 미래인재' 양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SW, AI, 빅데이터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단계별 AI 교육 기반 조성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

III 윤석열 정부, 교육공약-국정과제(교육분야)-교육부 업무보고와의 연계성

- 국민의힘 대선 교육공약 (47개 과제) → 국정과제 7개 채택, 수용률 14.9% (문재인 정부 78%)
- 국민의힘 대선 교육공약 (47개 과제) → 교육부 8개 과제 채택, 현재까지 17% 수용률
- 국정과제 (31개 과제) → 교육부 7개 과제 채택, 현재까지 22.6% 수용률

III 윤석열 정부, 교육공약-국정과제(교육분야)-교육부 업무보고와의 연계성

구분	대선 교육공약	국정과제(교육)	교육부 업무보고('22.7)	교육부 업무보고('23.1)
유아돌봄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실시	○	○	○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운영시간을 확대해 초·중·고등학교 운영	○	×	○
초·중등교육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로 아이들의 학습권 강화	○	×	○ (교육전문대학원)
고등교육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	○	×
	지역·중·고·대학 연계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 조성	○	○	○ (RISE 사업, Glocal 대학)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마련	○	×	○
	일부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	○	○	○
직업교육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	○

주 : 국민의힘 대선 교육공약(15개 분야 47개 공약 과제), 국정과제(6대 국정목표-20개 약속-110대 국정과제- 31개 교육과제), 교육부 업무보고('23.1)(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

III 윤석열 정부, 교육공약-국정과제(교육분야)-교육부 업무보고와의 연계성

- 교육부가 2023년 1월 5일에 발표한 10개 교육개혁 핵심정책, 22개 세부 정책 중 교육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안되지 않은 **교육부 독자적으로 발표된 12개 과제(54.5%)는 의견 수렴과정이 없이 발표되었고, 파급력이 큰 정책인 만큼 교육계에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음**(〈표 3〉 참조).
- ✓ 고교다양화, 교육전문대학원, 교육자유특구, RISE 사업, 러닝메이트제 등

〈표 3〉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정책, 22개 세부과제 (교육부, 2023. 1. 5) * 파란 글씨는 교육부 독자적과제임.

1 학생맞춤 교육개혁	(1)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방법혁신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수립 발표 에듀테크 진흥방안도 상반기 내에 수립
	(2) 학교 교육력 제고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학점제 보완방안과 교실 수업 혁신방안 상반기 마련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 (국립고 강화, 고교다양화 등) 발표
	(3) 교사혁신 지원제도 마련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학교행정 경감 및 교원인사 제도 개선 시안 마련
2 가정맞춤 교육개혁	(4) 유보통합 추진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1월에 설치 관내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 간 격차 완화방안 마련 발표
	(5) 놀봄학교 추진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 사각지대 유형 다양화 및 운영시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4개 내외 시범교육청을 선정 인력과 재정 지원
3 지역맞춤 교육개혁	(6) 과감한 규제 혁신 및 권한 이양, 대학구조개혁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정원, 학사, 재정운영 규제 제거, 사립진흥재단의 재정원천과 대학교육·전문대학교육의 기관평가인증 활용 일반재정 지원 경영위탁대학 구조개선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 배치 승인 등 권한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 지자체 이양
	(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법령 정비) 2024년부터 시범운영 RISE 사업 2023년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25년 전면 실시)
	(8) 학교시설 복원화 지원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Glocal) 대학 육성 학교시설 복원화 활성화 방안 교육부 내·외 다양한 정책과 연계한 학교시설 활용방안
4 산업·사회맞춤 교육개혁	(9) 핵심 첨단분야 인재육성 및 인재양성 전략 회의 출범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재양성 전략회의 2월 출범 핵심분야 인재양성 방안 순차적으로 발표
	(10) 교육개혁 입법 추진 (3개) -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 - 교육자유특구,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자립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 교육자유특구 구상 마련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

Ⅳ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과정의 5대 난맥상

1.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

- 현 정부는 노동, 교육, 연금개혁+정부개혁 등 3+1대 개혁과제 중점
 - ✓ 준비 안 된 정책의 모호성과 혼선, 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반감 등으로 국민적 공감보다는 저항이 증폭되어 개혁 동력 상실 위기
 - ※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통령, 대통령실, 노동부 등의 혼선 사례
- (근거 사례 1) 지난 2022년 8월 8일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 논란 속에 사퇴 (34일 단명한 장관)
 - ✓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은 대선과정에서의 교육공약, 국정과제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의제
 - ✓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도 '2025년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밝혔다가 다시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사상 초유의 졸속행정으로 아마추어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음.
- (근거 사례 2)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교육공약과 국정과제 중 현재 교육부가 채택한 의제는 대선 교육공약 중 17%, 국정과제 중 22.6% 수용률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정책 설계과정에서 지향점과 가치, 정책의 이해도 수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59과제 중 46개 과제 교육분야 국정과제 채택, 수용률 78%

Ⅳ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과정의 5대 난맥상

1.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

- (근거 사례 3) 대선 교육공약 - 인수위 국정과제 - 교육부 및 정부 당국의 발표 과정에서 말바꾸기와 일관성 결여
 - ✓ 윤석열 후보(2022년 2월 14일) : "지역거점대학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 ✓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2022년 4월 27일) : "방만한 교육예산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정난에 빠진 지방대학 쪽으로 돌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
 - ✓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2022년 5월 3일) :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지역대학·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위원회 설치"
 -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2년 6월 16일) :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 ✓ 교육부와 기재부 (2022년 11월 15일)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1.2조 편성"
 - ✓ 국회 법안 통과(2022년 12월 24일)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의결
- (근거 사례 4) 유보통합, 교원 수급 및 양성 정책(전문대학원 신설), 고교 교육력 제고 등 정책의 대부분이 정책 발표 시기를 연장하거나 유보하고 있음.

Ⅳ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과정의 5대 난맥상

2.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가치와 지향점, 신자유주의 복원

가. 고교다양화가 아닌 고교서열화 복귀

- 국정과제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에서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을 제시하였지만,
- 정부 출범 후 교육부 1차 업무보고(2022.7)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고교체제 구현’ 영역에서 학교교육 다양성 및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 마련(‘22.12)을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급선회 사례가 되었음.
- ✓ 영재고가 2027년 광주·충북에 2곳 신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협약형 공립고’ 시범 운영 등
-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고교 300개 다양화 정책 시즌 2’가 시작되었고, 고교 서열화 복원되었음.

Ⅳ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과정의 5대 난맥상

2.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가치와 지향점, 신자유주의 복원

나. 지역 소재 대학 살리기가 아닌 지방 소재 대학 구조조정 및 경쟁 구도 가속화

-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 방향은 ‘지방 권한 이양’, ‘규제 혁신’,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초점 맞추고 있음.
- 이를 위한 핵심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 우려
 - ✓ 교육부는 2027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30개 안팎의 대학을 ‘글로벌대학’ 선정, 5년간 대학당 1천억원 지원 발표
 - ✓ 라이즈 사업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권한의 상당 부분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정책, 올해와 내년 5개 내외 비수도권 시·도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 뒤 2025년에 17개 시·도로 확대(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 원 이상)
 - ✓ 글로벌대학 선정되려면 대학 스스로 쇄신과 혁신 의지를 교육부에 보여줘야 함(국립대의 사·도립화가 대표적인 예?) → 매우 우려
 - ✓ 이러한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조치와 같은 국립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우려스러운 사업임.
 - ※ 사립대 의존율이 가장 높은 한국; 사립대 278개(85.5%) : 국·공립대 47개(14.5%)
 - (4년제 대학 기준, 사립대 153개(79.3%) : 국·공립대 40개(20.7%))
 - ✓ 또한, 글로벌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대학들은 도태되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작동되어 각자도생의 대학간 경쟁구도 정착
 -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을 고려한다면(전국 평균 45.3%, 수도권 제외 36.5%)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
 - ✓ 선정된 개별 대학에게 매년 200억원 지원 규모는 절대적으로 미흡함.
 - ※ 세계 유수 대학의 예산 규모를 보면, 글로벌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의미없는 규모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음(<표 4> 참조).
 - ✓ 오히려 기존의 사업성 정책의 부작용처럼 이 사업 또한 대학을 통제하는 사업별 대학경쟁체제 부활, 대학의 순응주의 확산, ‘대학 서열구조’ 고착화 가능성이 우려됨.

Ⅳ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과정의 5대 난맥상

2.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가치와 지향점, 신자유주의 복원

나. 지역 소재 대학 살리기가 아닌 지방 소재 대학 구조조정 및 경쟁 구도 가속화

〈표 4〉 국내외 대학의 예산 규모 현황 비교

국내 대학				해외 대학			
대학명	학생 수	전임교수 수	예산 (억원)	대학명	학생 수	전임교수 수	예산(\$)
서울대 (국립법인)(22)	27,924	2,141	9,411	Harvard Univ. (사립)(21-22)	21,119	2,274	\$58억 (7조 8,300억원)
연세대 (사립)(22)	29,832	1,712	5,922	Stanford Univ. (사립)(21-22)	16,937	2,288	\$74억 (9조 9,900억원)
고려대 (사립)(22)	29,445	1,511	6,565	Univ. of Chicago (사립)(21-22)	18,452	1,819	\$52억 (7조 200억원)
성균관대 (사립)(22)	26,851	1,525	5,024	Columbia Univ. (사립)(21-22)	31,802	1,657	\$58억 (7조 8,300억원)
부산대 (국립)(22)	27,386	1,221	3,102	Univ. Of Wisconsin- Madison(공)(21-22)	45,177	2,294	\$36억 (4조 8,600억원)
경북대 (국립)(22)	26,917	1,223	3,471	Univ. of California- Berkeley(공)(21-22)	44,621	1,545	\$34억 (4조 5,900억원)
전북대 (국립)(22)	23,429	1,060	2,925	동경대(21-22)	28,785	2,322	2,818억엔 (2조 9,335억원)

주: 1) 학생 수는 학부, 대학원 재학생 기준임.

2) 국내 대학 예산은 국립대는 대학회계, 사립대는 교비회계 기준임. 외국 대학 예산은 Sources of Operating Revenue 기준임. 3) 환율은 해당 연도 기준으로 \$1=1,350원, 일본 100엔=1,041원으로 추정하였음.
자료: 각 대학 홈페이지.

Ⅳ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과정의 5대 난맥상

2.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가치와 지향점, 신자유주의 복원

다. 대학의 규제 완화로 대학의 시장화 확산

-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 하향 조정
- (쟁점 1) 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인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의 2.8% 이상만 대학에 지원하면 해당 연도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사학법인은 대학의 건물과 땅을 좀 더 자유롭게 상업시설로 전환하거나 매각을 통해 교육과 연구가 아니라 법인과 사학소유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음.
- (쟁점 2) “교원 확보 시 겸임·초빙 교원 비율을 현행 1/5에서 1/3로 확대하고,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를 요건 폐지”의 내용은 현재 교수 대비 학생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인 상황에서 겸임교원 등을 전체 교원의 1/3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교수의 질 저하와 대학의 미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Ⅳ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과정의 5대 난맥상

3. 현 교육부 장관 이후 다시 교육부 독주 심화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

가. 교육부 주도의 정책 추진 방식 유지;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위상과 역할 약화

- 2022년 9월 27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과 관계없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할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 출범
 - ✓ 설립 취지는 정권과 관계없이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 일관성 유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임.
- 출범한 지 반년이 된 국교위의 존재감은?
 - ✓ 조직 규모, 위원장과 상임위원 포함 공무원 정원 31명 수준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63명), 국가인권위원회(205명) 1/5 수준임.
 - ✓ 교육부의 거수기 역할(?);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 9일 만에 의결

Ⅳ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과정의 5대 난맥상

3. 현 교육부 장관 이후 다시 교육부 독주 심화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

나. 교육부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교육공약, 국정과제와는 별도의 독자적 교육개혁 과제 발표

- 교육부 발표 정책 중 대선 교육공약 중 17%, 국정과제 중 16.1% 수용률에서 보여주듯이, 교육부의 top-down 방식의 독자적 정책 발표 난무
 - ✓ 예를 들어) 교육공약(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 국정과제(84. 교원업무부담 경감) - 교육부(교육전문대학원 설치)
 - ✓ 교육자유특구 법안 제정,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등

다.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정책의 연장선 성격이 강함; 이주호 장관의 효과(?)

-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발표한 정책 중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정책이 다수
 - ✓ 그 이유는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유사한 정치이념, 두 정부에서 이주호 장관이 교육정책을 주도 하고 있기 때문(박남기, 2023, pp. 5~8).
 - ✓ <표 5>에서 보듯이, 교육정책 비전은 이명박 정부의 꺼져가는 '교육(엔진) 살리기'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으로 변모했고, 정책면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학생 맞춤형 교육은 윤석열 정부에서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학교의 자율 경영체제 구축은 학교 자율성 확대로,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는 교육자유특구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협약형 공립고로, 그리고 교과서 선진화는 디지털 교과서 등으로 부활하였음.

Ⅳ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과정의 5대 난맥상

3. 현 교육부 장관 이후 다시 교육부 독주 심화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

〈표 5〉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초·중등교육정책 비교

구분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비전	• 교육(인재)살리기	•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교육정책	• 학생 맞춤형 교육	• 개별맞춤형 교육
	• 학교의 자율 경영체제 구축	• 학교자율성 확대
	•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 교육자유특구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 협약형 공립고
	• 교과서 선진화	• 디지털 교과서
	• 미래사회 핵심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 미래에 필요한 필수 역량 함양
	•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	• 모든 학생 기초학력 보장

출처: 박남기 (2023), p. 8.

Ⅳ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과정의 5대 난맥상

3. 현 교육부 장관 이후 다시 교육부 독주 심화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

라. 최소한의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정책 추진

- 교육부가 입법예고했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매우 중요한 변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고등교육의 이해당사자들과 소통뿐만 아니라 공청회도 없이 급히 발표하였음.
- 그 외 러닝메이트법 제안, 교육자유특구법 등도 국민 의견 수렴과정이 없이 일단 교육부가 발표하고 그 이후 야당을 설득하며 법안 처리하려는 전략
- ✓ 교육계의 갈등을 촉발시킨 중요 교육재정정책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과정이 그 사례임.

Ⅳ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과정의 5대 난맥상

3. 현 교육부 장관 이후 다시 교육부 독주 심화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

마. 교육부(교육부장관) 주도의 국립대 통폐합 시도(?)

- 지난 2023년 3월 31일 입법예고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학을 통폐합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임.
※ 국립학교 설치령 제24조(대학 통·폐합) 교육부장관은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 통·폐합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교육부공고 제2023-118호).
- 국립학교설치령은 고등교육법 제18조, 19조에 위임되고, 그 법안에는 명칭과 조직에 관한 규정만 있음.
 - ✓ 따라서 국립대학 통폐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남.
 - ✓ 헌법에 명시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임.
- 또한 헌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고 되어 있고, 이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성 자체를 부정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

Ⅳ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과정의 5대 난맥상

4. 보수 정권의 주특기, 교육계의 갈등 비용만 증폭 전략

가.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 사례에서 나타난 갈등 사례

-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적으로 신설하였고,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 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3 1.5조 원) 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3 0.2조 원)을 고등교육에 지원하게 되었음.
- 시·도교육청과 대학간의 갈등, 대학간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그리고 국·공립대와 사립대와의 갈등 증가
- 여기서 쟁점은
 - ✓ 첫째,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감축의 결정요인일 정도로 교육재정 규모가 충분인가 하는 쟁점
 - ✓ 둘째, 추가 고등교육재원인 1.7조원이 과연 적절한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확보한 것인지에 대한 쟁점

Ⅳ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과정의 5대 난맥상

4. 보수 정권의 주특기, 교육계의 갈등 비용만 증폭

나. “교육자유특구” 로 지역마다 분쟁과 갈등 확대 가능성

- 이 의제도 교육공약이나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보고(10대 과제 중 핵심 4대 법안 포함).
 - 하지만 핵심적인 규제 특례 내용, 적용 범위(수도권 포함 여부 및 학교급별 해당 여부 등) 등 구체성과 명확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고 명칭만 내세운 제도 근거를 미리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 특히, 「(가칭)교육자유특구법안」이 제출되면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간 쟁점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행안위에서 우선 근거부터 마련하게 된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안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우려되는 부작용
 - ✓ 지역마다 양질의 학교 양성이라는 미명하에, 지역마다 성적 중심의 선발체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성적 중심의 명문고(?) 등장
 - ✓ 학교서열화, 귀족학교 정당화로 교육계의 시대착오적인 성적경쟁체제로 전락 → 고교평준화 무력화, 사교육 팽창 가속화 우려
 - ✓ (제기되는 쟁점) ①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교육자유특구로 인한 수도권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입시 명문고가 신설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특별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논리적 모순의 의제 ② 입시 명문고 신설 등은 산업사회 공장형 학교로의 회귀이고, 지필고사 중심의 성적 중심 선발로 후진적 학교체제로 전락
 - ✓ 내년 국회의원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명문고(?) 설치 공약 난발로 교육계 갈등 우려
- ※ 과거 2000년대 초반 수도권·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특목고 유치를 위한 ‘교육특구’ 공약이 각종 선거에서 범람 → 분쟁과 갈등의 확대 경험

Ⅳ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과정의 5대 난맥상

4. 보수 정권의 주특기, 교육계의 갈등 비용만 증폭

다.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따른 교육계 갈등 증폭

- 국정과제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2022년 7월 교육부 업무보고에도 없었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이주호 장관 이후 제안된 갈등 의제로 부각
 - ✓ 이명박 정부에서 논의했던 교육감직선제 폐지 주장과 맥을 같이함.
 - ✓ 더불어민주당,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계 대부분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23년 업무보고에 4대 법안의 하나로 포함시켜 향후 갈등 소지가 매우 높음.
- 하지만 지난 2023년 3월 22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통과함으로써 갈등 국면은 국회의 손으로 넘어간 상황임.
 - ✓ 동법 제12조 제2항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Ⅳ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과정의 5대 난맥상

5.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추진 방식의 쟁점

가. MB정부 시행령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법령 제·개정 전략으로 선회

-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 설계의 대부분은 법령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한데 **갈등의 소지가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구도임**. 입법에 실패할 경우 성과가 없어 비판과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임.
-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방대 지원 계획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관련 법령 개정,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인재양성 기본법 등 인재양성 3법(국가인재양성기본법, 직업교육법, 인재데이터관리법) 제정 추진, 4대 교육개혁 입법(러닝메이트법, 교육자유특구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추진 등은 이해 충돌 혹은 갈등 소지가 많음.
- **사전에 협의도 없이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발표한 이후, 야당과 타협하며 4대 개혁 입법 등을 제·개정하려는 전략**

나. 실효성 없는 사업 기반 정책의 한계성

- 고등교육 관련 국정과제는 9개임 : 교육부 단독 과제(4개), 과기정통부(2개), 산업부(1개), 중기부(1개), 국토부·금융위·고용부·중기부·교육부·국방부·국조실 (1개)
- **교육부 이외 다른 부처 과제는 주로 사업 기반 정책임 → 사업 기반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의 한계**

V 총평 및 향후 대응 방안

1. 총평

-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정부**
-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가치와 지향점은 신자유주의 복원**
 - ✓ 고교서열화 복귀, 지방 소재 대학 구조조정 및 경쟁 구도 가속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대학의 시장화
- **이주호 장관 이후 다시 교육부 독주 심화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
 -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약화, 대선 교육공약 중 17%, 국정과제 중 22.6%만 교육부가 채택,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정책의 복원, 최소한의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없는 정책 추진 방식 등
- **교육계의 갈등 증폭 전략**
 - ✓ 고등·평생교육자원특별회계 도입, 교육자유특구,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교육계 갈등 증폭 가능성 높음.
- **비효율적이고 정략적 교육정책 추진 방식**
 - ✓ 사전에 협의도 없이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발표한 이후 야당과 타협하며 4대 개혁입법 등을 제·개정하려는 전략과 실효성없는 사업 기반 위주의 정책 추진

V 총평 및 향후 대응 방안

2. 향후 대응 방안

□ 문제의식 배경

가. 교육문제의 블랙홀, 초 극단화된 대학서열구조와 학벌주의가 근본 원인임을 인정해야...

-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성적 경쟁과 배제의 논리 심화, 사교육비 확대, 그에 따른 승자독식, 각자 도생의 교육이 문제라고 하지만, 과열 대학입시의 근본 원인은 초 극단화된 대학서열구조와 학벌 중시 고용구조임을 인정해야 함.
- 대학서열구조와 학벌주의 문제를 놔두고 입시제도 개선만으로 교육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임.
- 대학서열구조와 학벌주의 폐해는 결국 교육공정과도 연결이 됨. 우리 국민 대부분이 공분하고 있는 '부모찬스' 문제는 교육 양극화, 교육 불공정, 교육 불평등 현상의 핵심 원인이고, 학벌 중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현실 장벽임.
-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변적인 요인을 개혁하려는 교육정책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V 총평 및 향후 대응 방안

2. 향후 대응 방안

□ 문제의식 배경

나. 복합위기(Hybrid Crisis) 시대, 4차 산업혁명 등 대전환시대라는 세기적 변혁기, 과감하고 근본적인 교육 체제 대전환을 위한 큰 그림을 설계해야...

-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교육의 대전환으로 노동생산성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격적 방안 마련해야
- 제4차 산업혁명의 한 대목인 ChatGPT의 등장에서 목격하듯이, 교과서 중심의 지식 암기 지향 교육에서 벗어나고 단 순히 AI 맞춤형 교육을 넘어서는 “융합형·협력형 성장기반 교육체제”로 대전환해야
 - ✓ 성적 지향의 학력관과 능력주의(Meritocracy)의 대개편이 필요한 시점
- 경제사회 초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학생과 학교 지원체제 대전환 방안 마련해야
-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아닌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체제로 대전환하는 과감한 방안 마련해야

V 총평 및 향후 대응 방안

2. 향후 대응 방안

□ 문제의식 배경

나. 복합위기(Hybrid Crisis) 시대, 4차 산업혁명 등 대전환시대라는 세기적 변혁기, 과감하고 근본적인 교육 체제 대전환을 위한 큰 그림을 설계해야...

-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교육의 대전환으로 노동생산성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격적 방안 마련해야
- 제4차 산업혁명의 한 대목인 ChatGPT의 등장에서 목격하듯이, 교과서 중심의 지식 암기 지향 교육에서 벗어나고 단순히 AI 맞춤형 교육을 넘어서는 “융합형·협력형 성장기반 교육체제”로 대전환해야
 - ✓ 성적 지향의 학력관과 능력주의(Meritocracy)의 대개편이 필요한 시점
- 경제사회 초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학생과 학교 지원체제 대전환 방안 마련해야
-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아닌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체제로 대전환하는 과감한 방안 마련해야

V 총평 및 향후 대응 방안

2. 향후 대응 방안

□ 문제의식 배경

나. 복합위기(Hybrid Crisis) 시대, 4차 산업혁명 등 대전환시대라는 세기적 변혁기, 과감하고 근본적인 교육체제 대전환을 위한 큰 그림을 설계해야...

우리나라 학교교육 시스템 대전환을 위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함.

- ✓ 첫째, 교육문제의 블랙홀, 대학서열구조와 학벌 중시 고용구조를 혁파하기 위하여 교육체제는 어떻게 대전환해야 하는가?
- ✓ 둘째, 경제사회 초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체제는 어떻게 대전환해야 하는가?
- ✓ 셋째, 혼란위기와 대전환 시대, 지속 가능한 국가성장 잠재력의 핵심 요인인 교육체제의 대전환 방향은?
- ✓ 넷째, 국가혁신과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DNA는 교육경쟁력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별 학교와 개인의 경쟁력이 아닌 학교교육 전반의 체제 대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V 총평 및 향후 대응 방안

2. 향후 대응 방안

□ 대응 방안

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미래 교육대전환 체제 설계

교육양극화 극복과 교육공정 실현 + 미래 교육대전환 체제 설계

- (포용성, 평등성, 공동체주의 원칙) 교육불평등을 넘어 **교육양극화 극복과 교육공정 실현**
- **Global First Mover를 위한 과감한 미래 교육대전환 체제 설계** (민주진보진영의 부족한 영역)
 - ✓ (미래 학력관, 인재상 재정립) 질문있는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협력적 문제해결능력, 자존감있는 도전 역량 향상에 대한 원칙
 - ✓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가 책임과 사회적 책무 강화) 국가와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SDG)에 초점을 두고 설계
 - ✓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수월성 확보 원칙) 학교, 개인 모두 함께 성장하는 모델에 초점을 두고 설계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 대학 컨소시엄
(CUMMA) 사례



프랑스 대학통합 및 연합정책 4가지 유형 중
"실험적인 단계의 공공교육기관연합
(Etablissement public expérimental,
EPE) 체제" 사례

V 총평 및 향후 대응 방안

2. 향후 대응 방안

□ 대응 방안

나.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각종 현안 교육쟁점에 대한 **"대안 법안"** 마련으로 대처
 -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사립대학법 제정
 - ✓ 지방대 지원 계획수립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관련 법령 개정 →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
 - ✓ 교육부의 4대 교육개혁 입법(러닝메이트법, 교육자유특구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항
 - ✓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 ✓ 고등교육재정 확보 관련 대안 법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세법 등) 제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OECD 평균인 GDP의 1%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고등교육재정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등) 마련하는 방안, 혹은 GDP 성장률과 연동하여 재정 확보하는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그리고 중장기 방안으로 고등교육세 신설(안) 등 좀더 적극적인 고등교육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전략이 요구됨.

V 총평 및 향후 대응 방안

2. 향후 대응 방안

□ 대응 방안

다. “교육대전환을 위한 국민의힘(가칭)” 상시 운영 : 민주진보교육플랫폼의 역할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민주당 교육특위, 민주연구원, 시민단체, 교사단체 등 교육대전환을 위한 국민과의 공론장 마련하여 공감대 형성하고 집단지성에 의해 미래 가치를 수렴하는 긴 호흡의 노력 필요
- 현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진보 진영에서 반드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전략적 시도임.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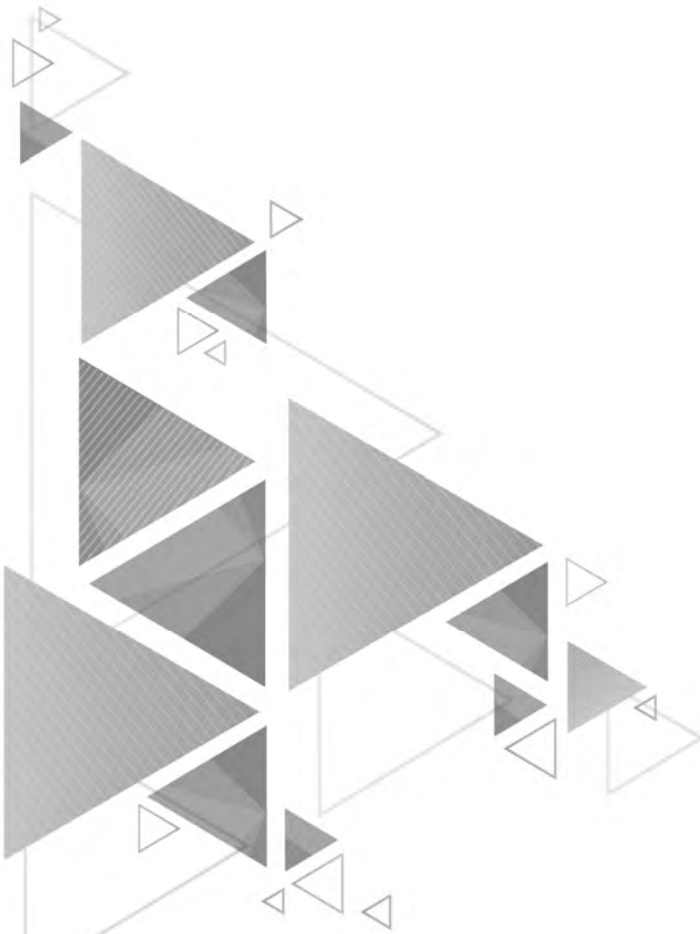
- 국민의힘(2022).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 교육부 (2022. 7. 29). 새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 (보도자료).
- 교육부 (2022. 9. 15). 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을 적극 지원 (보도자료).
- 교육부 (2023. 1. 5).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 기획재정부 (2022. 7. 6).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보도자료).
- 박남기 (2023).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방향과 절차의 특징 진단 및 대안”.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정책 긴급 진단』. 한국교육학회 2023년 제3차 교육정책포럼.
- 반상진 (2023).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재정 확충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제32권 제1호)』. pp. 31-58.
- 반상진 (2023). “고등교육정책의 쟁점과 소망하는 과제”. 『대한민국 교육개혁 방향은』 발표자료.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뉴스핌. 국회의 원회관 (2.20).
- 반상진 (2023). 『대학체제의 새판짜기: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대전환을 위하여 (출간 중)』. 전주 :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5).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 Boggs, Bennett G. (2019. 03). A Promise is a Promise: Free Tuition Programs and How They Work (paper No. 5). A Legislator's Toolkit for the New World of Higher Education.
- OECD (2010-2022). *Education at a glance*.
- UNESCO (2022). *Reinventing Higher Education for a Sustainable Future*. The 3rd World Higher Education Conference WHEC2022. Barcelona 18-20 May 2022.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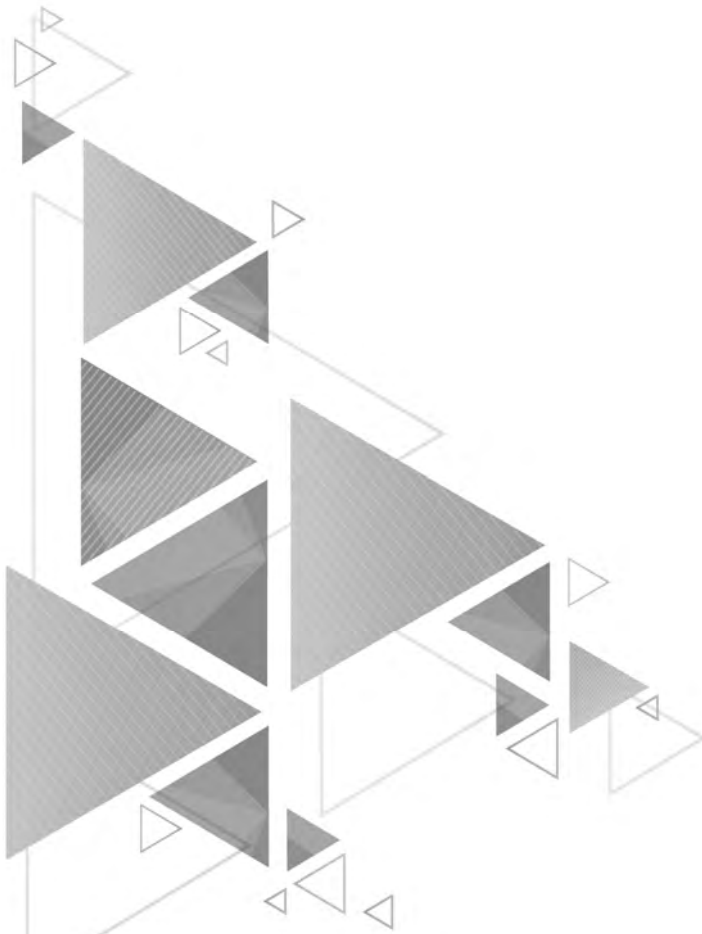
강훈식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토론 2

김영진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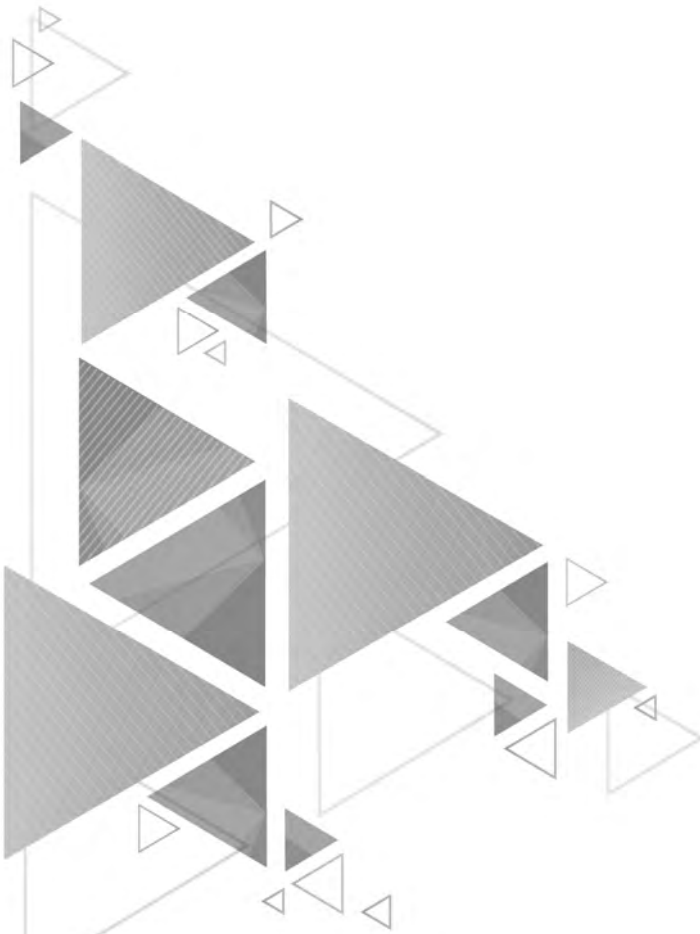


memo



토론 3

김영호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간사)



제2차 사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